

# 민주, 이재명 지시로 김남국 윤리위 제소... "진상조사 한계"

###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인정 공직자윤리규범 준수 책임 묻는 차원 당 윤리감찰단 활동도 마무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성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간략히 밝히겠다.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기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리고 김남국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보니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을 내자고 한 것과는 별개라고도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 묻자 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사실상 종료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은 압수수색 등 본인의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메시지로도 보내온 바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남국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당에서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부 매각을 권유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전량 매각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 맞는지 묻자 "확언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와 함께 지속하려던 당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는 "윤리감찰 지시 내인 건 상임위 코인 거래 여부 확인이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안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라 윤리감찰단 업무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민주, 내년 총선서 5·18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공식 제안

### 이재명 "尹, 공약이었던 5·18 헌법전문 수록 지킬 때" 박광온 "5·18 헌법전문 수록에 당력 집중...개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던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를 확고하게 내려졌다. 지난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 이견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운 방법"이라며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참석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 전폭 협조하겠다"며 "지난해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눈을 뜨고 봐도 없었던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이 올해 대통령 기념사에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근 5·18 특별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 "5·18 운동을 폭도들과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작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자(태영호 의원)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 처분이나 하는 국민의힘에 '코인 보유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공휴일 지정 강조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석곡동)이 16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의미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최기영 의원은 매년 5월 18일을 북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의 의미와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되새기는 날로 지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지 올해로 4년차가 되었지만 무늬만 휴일에 그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저조해 여전히 반쪽짜리 휴일이 되고 있다"며 "또한 우리 구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8일 당일엔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등의 각종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북구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인식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지방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일년 중 하루를 쉬는 문제가 아닌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송고한 5월 광주정신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의미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영 의원은 "매년 5월 18일 지방공휴일 참여가 공문 발송이나 SNS 홍보, 보도 자료 배포 등 단순 홍보로만 그치지 않고 북구 정부터 출신수법해야 한다"며 "5.18 지방공휴일에 북구 주민들과 북구 공직자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가족, 지인과 함께 80년 오월의 아픔과 5.18의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